



한·미FTA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회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부가 미국과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멈추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FTA체결을 우리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만큼 동등한 협상이 아닌 굴욕적이고 졸속으로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한·미 FTA체결을 희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가격 재평가,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4대 선결조건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4대 전제조건중 하나인 약값재평가 문제는 통상현안회의가 있기 전인 작년 10월에 정부가 유보했으며, 11월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위해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1월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으며, 뒤이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였다.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FTA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국무총리 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대행은 미 의회가 정한 신속무역촉진법을 염두한 듯 "2007년 3월까지 한·미 FTA를 체결을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보면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정부가 국민의 원성을 경청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15일 대학로에서 가진 ‘한·미FTA저지 쉼기대회’에 농업계를 비롯 영화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연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1만 여명의 인파가 한·미 FTA체결 반대를 부르짖는 이유는 한·미FTA체결 될 경우 우리 농업계를 비롯하여 국내 산업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체결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FTA체결을 통해 교육, 의료, 법률 시장 등을 개방하게 되면 외자를 유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불과 8년전 IMF 경제위기 시절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도 높이고 기업이 얻은 이득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업계를 비롯, 한·미FTA체결을 반대하는 이들이 맹목적 민족주의자들도, 무조건 개방을 반대하는 쇠국주의자도 아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 오던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굴욕적인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종속화되어 경제적인 주권을 잃는 것을 두고만 바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미국의 거대 자본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톤 스타’와 같이 대규모 해외 자본이 국내산업의 자본을 잠식함에 따라 국부 유출 및 경제적으로 종속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입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식탁을 점유 할 경우 쌀 자급률이 계속 낮아져 결국 우리의 식량안보가 미국 등 쌀 수출국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토대로, 한·미FTA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이해득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득이 없다는 판단이 되거나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자세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의 FTA체결을 시도하였지만, 미국이 스위스의 농업시장 개방을 무리하게 요구하자 협상체결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호주와의 FTA체결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자 민감 품목에 대해 18년 또는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체결협상이 본격화 되자,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실리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한·미FTA를 구결하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한·미FTA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굴욕적인 협상 태도는 자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만한 최소한의 자주외교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 농업계는 한·미FTA체결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FTA 이외에도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농산물과 시장경쟁을 벌여야 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리 농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고급화와 경영합리화를 일구려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